

제358회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3월19일(월)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계속)

상정된 안건

- 1.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계속) 1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계속)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형태(권력구조) 분야에 대한 논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논의 자료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한 개헌소위의 논의 경과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주까지 개헌소위를 포함하여 전체회의에서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함께 배부해 드린 '2017년 개헌특위 집중토론자료 수정본 정부형태총론·입법부·집행부'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이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내용이 알려졌고, 그리고 사흘 간격을 두고 하던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마 그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것 같고, 또 대통령께서 기일을 정해서 발의 준비를 말씀하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자리를 함께 해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의장님 말씀으로는 개헌 시기가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 진척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가감 없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成泰 위원 위원장님!

○김진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金成泰 위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매우 신중하고 또 여야 특위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3월 26일 대통령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금 일제히 철회를 촉구해 오고 있는 과정에 21일 발의에서 26일로 연기하겠다, 5일간의 말미를 주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큼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개헌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고 또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4개의 야당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개헌의 합의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한국당이 개헌의 의지를 밝혔고 개헌 시기와 방향과 로드맵까지 이미 입장을 내놓았고 또 바로 며칠 내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체화시켜서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한 대통령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것은 전혀 안중에 없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예정된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이미 여당이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사실상 개헌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 개헌 과정에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4년 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8년의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30년 만의 기회를 맞는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이 맞는 건지, 이것은 바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다, 그리고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절대권력이 매우 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3일,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하면서 지연 책임을 야당에 넘겼습니다.

문 대통령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과연 국회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했습니까? 2017년 3월 15일,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선과 연계해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합의한 데 대해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극렬히 반대했던 분이 바로 지금의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반대했습니까?

문 대통령이 2012년 7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에 대해 국회가 개헌을 통해 현재 사실상 대통령 권한으로 되어 있는 국무총리 인사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라며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개헌 논의가 촉발되었고, 무엇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인지 개헌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되시더니 절대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지금이라도 관제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개헌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국민의 여망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개헌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 발언은 그러한 의사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본안에 대한 발언이신지?

하여튼 그거는 중요치 않은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좀 하실 거고 시간도 좀 길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간사 세 분과 잠깐 의논 좀 하십시오. 좀 한번 와 보시지요.

이태규 위원님, 잠깐 앞으로 와 보시지요, 김관영 위원 안 오셨잖아.

(위원장, 간사와 협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순서 없이 신청하시는 위원님들 순서대로 발언의 기회를 드렸는데 오늘은 김경협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김성태 위원님 또 김상희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이런 순서로 순서를 정해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5분에다가 추가 시간 2분을 더 드립니다. 항용 지금

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엄하게 하겠습니다, 5 플러스 2.

○**김경협 위원** 기초발제 하셨는데 우리도 기초 발제……

○**위원장 김재경** 그거는 나중에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도 의사진행성 발언인지, 안 그러면 개정 분류에 대한 발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응은 그 순서대로 하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신청하면 기회를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헌특위가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15개월,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헌 논의는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들에 대한 각각의 의견은 나와 있는데 지금은 각 당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을 가지고 3당 또는 4당 간에 조율하고 이제 조문화 작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당 쪽의 안이 정확히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약속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작년 대선 때 여야 5당의 대선후보가, 각 당이 다 했던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 가지고 안을 안 내놓고, 이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시기 문제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만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오늘 아침에 소위에서부터 성토대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대통령 개헌 발의를 성토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바로 여기서 개헌안들을 가지고 조율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조문화 작업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오로지 대통령이 개헌 발의한 것만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헌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작년 대선 때입니다. 4월 12일 국회 헌정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

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5월 4일 날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 즈음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다’, 5월 8일 개헌연대에 제출한 답변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17년 9월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공약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 9월 대정부질문 때는 황교안 당시 총리에게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 낼 수 없다. 헌법 제128조 1항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이 명시되어 있고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지금의 원내대표, 당 대표가 다 이렇게 요구하다가 지금 국회의 논의가 이렇게 전혀 진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개헌시간은, 개헌의 시기는 최종 발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은 결국 개헌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하면 개헌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개헌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에서의 논의도 진척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개헌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개헌도 막겠다, 다시 말해서 개헌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호헌 세력으로 찍힐까 봐서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못 하고 개헌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핑계만 계속 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헌안을 내면 되는데 개헌안은 내놓지 않고 시기가 어떻게 발의권자가 어떻게 그다음에 그동안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개헌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전부 다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들어 왔던 게 우리의 개헌 논의 과정이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 일 시키려고 하면 별의 별 핑계 다 댁니다. 그러니까 본심이 뭐냐, 본심이?

개헌할 의지가 없는데 개헌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호헌 세력으로 찍힐까 봐서 그 얘기는 못 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

계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작년 대선 때 했던 공약 그리고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오신 이 약속들, 발언들을 정확히 먼저 지키고 이것을 못 지키면 왜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되고 작년에 대선 때 했던 공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할 것 같으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개헌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오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개헌 조문에 대해서 지금 바로 우리 간사들 간에 협의해서 개헌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대통령 발의가 26일 날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걸 뭐 개헌하지 말자는 거지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발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내로 합의하라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로.

지금 30년 만에 개헌하는 걸 오늘로부터 일주일 뒤에 대통령이 발의하니까 그 안에 합의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20일인가 21일, 내일이나 모레 발의하려고 했는데 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겨우 닳새를 지금 연기를 한 모양입니다. 닳새 동안에 국회 합의가 되겠냐고요. 예?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지금 이 개헌특위가 발족돼서 가동된 지가 6개월이 됐습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금년 들어서, 저 여기 들어와서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여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겠다고 해 가지고 26일 날 발의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 야당 위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왜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아니면 전체적인 국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대통령 발의안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뭘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계속. 이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대통령 발의안이 오면 수정 없이 가부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면 뭐 하나요. 지금 밝혀진 거는 4년 연임제로 하자, 그 외에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공개된 것도 없어요. 지금 일주일 뒤에 넘어온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하나씩 무슨 기본권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방분권에 대한 것 그다음은 권력구조에 대한 것, 하루에 하나씩 무슨 깜짝 이벤트 하듯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뭐 하나씩 던져 주고 숙제 내 주고 공부하라는 겁니까, 무슨 시험을 치라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 발의안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히려 이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헌특위, 일주일 동안은 중단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그걸 보고 가서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헌이라는 게 그냥 정부 여당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면 이게 정말, 이러니까 이게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다독거리 가면서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너네들 4년 연임제 싫으면 관둬.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일방통행’, 개헌이 화합과 통합으로 옥동자를 낳아야지,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부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 반드시 실패할 거다, 사생아가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완주 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윤관석 위원** 순서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인영 위원**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신청자 순이예요?

○**위원장 김재경** 아니, 그러니까 각 정당별로 섞어야 되니까 일단은 저렇게 하고, 제가 지금 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저는 지난번 회의 때 대통령께서 개헌안 발의하는 부분이 개헌의 촉진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책임 있는 개헌에 관한 정치 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문안 중에 이런 표현이 있네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고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청와대가 국회에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하는 이런 어투가 과연 개헌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개헌의 촉진을 위해서는 지금 내용의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 개정에 관한 정치 일정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구체적 청와대 발표 안을 봐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발의안과 그동안 여당이 주장했던 의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당이 그동안 헌법소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자문위의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축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찬반토론해서 가부만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여당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여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안과 국회안을 절충해서 소위 발채개헌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보다 책임 있는 의견을 좀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1 야당은 지방선거 동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지방선거 후에 6월 안에 개헌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제1 야당의 태도로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실현될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6월 안에 할 것이라면 6·13 지방선거 때 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헌에 대한 국회의 진정성과 타협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 합의 시한을 정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간에 합

동 끝장토론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공방만 벌이니까 대통령 개헌 드라이브에 지금 국회가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진정 민의를 대표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로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헌이 더 이상 당리당략이나 양당 기 싸움의 산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가,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만이 대통령의 발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발의 중단만 요구한다면 그 역시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1 당과 제2 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일단 대통령 발의와 관련해서요, 26일 날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여야 합의 시한을 청와대에서 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보는데 아마 의미는 끝까지 여야 간의 합의를 기대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도 그때 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당에서 대통령 발의를 보류를 요청하려면 야당이 여당과 같이 협상을 해서 ‘아, 이게 합의가 되겠구나.’ 하는 기본적인 실마리는 만들어 줘야 우리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우리 합의가 가능하니 좀 발의를 보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우원식 대표가 여러 차례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2+2로 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 협상을 하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한국GM 사태나 아니면 청년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뭔가 의사일정이 꼬인다고든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 정도의 여야 정치력 가지고는 무작정 ‘대통령 발의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히 야당, 특히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여당과 세부적인 조문에 대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개헌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객관적인, 상호간에 그런 컨센서스는 만들어 주셔야 대통령 발의 문제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일까지 시간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조문까지 합의는 불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리이러한 방향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가능해서 대통령이 발의를 안 하셔도 우리가 발의해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그다음에 여당이 가서 대통령과 상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야 간 대표들과 대통령이 상의하든지 하는 절차가, 이른바 정치적인 절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정치력을 우리 정치권이 발휘를 못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26일 날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고집부려서 발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여야 정치권이 정치력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면 길이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지만 국회의 발의권이 있거든요. 대통령 발의가 국회의 발의권을 전혀 제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발의를 했는데 여당이 '우리는 대통령이 발의를 했으니까 대통령안하고 똑같다. 우리는 협상 안 하겠다. 이것 표결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개헌 논의는 중단되는 거고 그냥 표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당이 '대통령이 발의했으나 우리가 여야 간에 추가 논의를 해서 국회 발의안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런 입장이라면 저는 국회의 논의를 지속해 나가서, 적어도 국회 발의는 4월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지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한번 시도해 봐서 그때 합의가 되면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개헌특위의 수석전문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법적으로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는 게 가능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4월 말까지 합의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철회 요청을 하면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논의가 중단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발의안이 정치적으로는 국회한테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은 어차피 공동 책임이예요. 우리가 공동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대통령 발의가 모든 것을 다 중단시킨다 이것은 과장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대통령 발의는 대통령 발의이고 국회 발의안을 만드는 노력을 4월 말까지 해서 국회 발의안이 완성이 되면 대통령과 상의해서 대통령안 철회하고 국회 발의안 표결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서 개헌 시기 문제에 대한 것까지도 합의가 된다면 대통령과 또 상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의 경우에 26일 날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하지 말고 우리 국회의 개헌 논의 일정은 좀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헌정특위와 관련해서는 저는 여야 지도부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릴게요. 여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 문제든 내용 문제든 협상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조금 더 천천히 하시려면 헌정특위에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A안·B안이든지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 수 있도록 헌정특위 자체가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확실하게 권한을 위임하든지 이 논의의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상수 위원 대통령 헌법 발의의 부당성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할까 합니다.

대통령 발의된 헌법안은 자구 하나도 변경이 없이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116명은 물론이고 아마도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이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 텐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정치권, 즉 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몰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안이 나오면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청와대안을 얼마나 비껴내서 고유의 안을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 오히려 개헌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했으니까 6월 13일 날 하자’ 이것도 다소 어거지입니다. 뭐 지키면 좋지요. 그러나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하면 되는 겁니다. 6월 13일이 언제입니까? 지자체에서 도장을 6개, 7개 찍어야 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지방의 4년을 앞으로 민생과 또 지방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투표인데다가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교육감선거도 있지요. 여기에 굳이 걸다리로 그야말로 100년 앞을 내다 볼 헌법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또 마침 남북관계에 있어서 4월 말경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말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야말로 대통령 말씀대로 ‘70년 만의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때입니다. 이것을 굳이,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개헌을 엮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몇 달 늦춰도 된다 이런 뜻으로 하는 얘깁니다.

이미 우리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선거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것을 발표했고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개략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으로 필요하다면 4월 말이 됐든 하여간 6월 선거 전에 우리 여야 간에 국회안으로 확정해 놓고 날짜를 따로 정해도 된다, 이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더 안정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대통령 연임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완전히 방향이 틀린 겁니다. 개헌 논의의 시작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멩을 벗겨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 제왕적 대통령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불행……

지금도 MB 마지막 대통령, 직전 대통령조차도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 가족들 뭐 할 것 없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고 또 대통령제에서는 그야말로 승자독식이 되고 단 한 표만 많아도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로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여당을 하수인으로 만들고 야당은 거기에 무조건 반대를 해야 돼서 국정운영이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건데 이것을 거꾸로 5년도 안 돼서……

5년이라면 그래도 한번 됐으니까, 저것 아무리 저렇게 잘못해도 언제면 끝나니까라고 국민들이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4년을 선거운동하고 4년을 레임덕에 빠지게 하는 이런 개헌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이게 무슨 역사관도 없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툭 던져 놓고…… 나는 앞으로 여당이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과 협상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다행스럽게 야 4당의 경우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금 분권형 대통령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상황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상욱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와 보니까 정말 정부 여당과 제1야당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방에서. 양쪽에서 대선 공약 때 한 것을 지켜라,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개헌은 시기보다 주체와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31년을 기다려 온 개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특위에 참여한 지—작년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이제 한 달여 됐을 뿐입니다. 한 달 만에 헌법 전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도 그것도 오만일 수 있고 또 자문위가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논의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밀실 작업이고 관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부와 야당이 정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쌍방 간에 개헌을 밀어붙여서

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발의에 의한 그런 거부감으로 국회의 개헌 논의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과 여당께 묻고 싶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고 싶다고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하면서 야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채로 밀어붙이기식의 개헌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야당의 의견도 무시되고 그러면서 권력 분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개헌이 됐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괴물과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제1 야당보다 의석수도 많고 또 집권을 하고 있는 강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제3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먼저 강자가 여유를 가지고 먼저 기회를 한번 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개헌 논의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어떤 면에서는 여당과 우리 당과 조금 내용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형식과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먼저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발의를 보류하는, 그래서 정말 제1 야당이 참여할 수 있게 그 문호를 열어 주시고 그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개헌 논의를 다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 여당 측의 특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병석 위원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위원장 김재경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오늘 청와대에서 26일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마디로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는 생각

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 끊임없이 ‘지방선거에 개헌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 왜 시기를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용으로 지금 개헌 발의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개헌 발의가 국회를 통과하기가 지금 어려운 사정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개헌 발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내심 의심하는 지방선거용 개헌 발의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 또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개헌 논의가 왜 나왔습니까? 왜 온 국민이 개헌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종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또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신년사부터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권력구조는 합의하기 어려우니 합의 쉬운 것부터 하자’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실상 국민들이 개헌을 해 달라는 내용은 외면하고 다른 쪽의 개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신년사에서. ‘권력구조는 어려우니 합의되는 것부터 개헌하자, 두 번째 이 개헌을 위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 우리 헌정특위 위원 누구도 대통령과 협의한 사람 없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우리와 말씀 한 번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려는 그러한 노력도 안 보이는 안을 가지고 사실상 지금 야당을 압박하는 이러한 모습은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아닌 본말이 전도된 개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통령제 30년 운영해 보니까 얼마나 그 폐해가 심했습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도 편안하게 지금 대통령의 자리를 마친 분이 없습니다. 아드님들이 구속되거나 또는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또는 대통령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런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렇게 불행했는데 우리가 4년 중임제로 했을 때 그 대통령제에서 과연 우리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분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토론했지만 아마 의원내각제에 관한 많은, 우리 의원들의 관심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주장하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할 노력을 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무조건 발의하시고 여당 의원들은 저희 당의 안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 여론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합의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시기로 야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기 연장을 위한 대통령제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전문이라든지 기본권 조항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보학자의 대표자이신 최장집 교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실질적 내용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 개헌을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이러한 개헌안에 대해서 시기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선거를 사실상 개헌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헌정특위에서 차분차분히 논의해서 6월 말까지 우리의 개헌안을 만들 것을 또 한 번 다짐하고 또 여당 위원들께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충남 천안을 박완주입니다.

먼저 이런 부끄러운 모두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혹합니다. 한마디로 밥값 못 하는 국회에 대해서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헌특위는 지난 탄핵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원내수석이면서 야당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날 합의하고, 2017년 1월 1일 자로 개헌특위 가동을 위해서 여야가 그 와중에도 출범시킨 특위입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참담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마치 정부안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반대 의견들을 내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상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스물네 번에 걸친 개헌특위의 노력, 자문위원, 이런 부분을 백번 양보하고 새로 2기에 의해서 구성했다라고 할지라도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개헌특위는 개헌을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개헌 저지 특위였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세 번에 걸쳐서 정부안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마치 오늘 처음 발표하는 듯이 국민들한테 대통령 발의가 불법 내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70% 이상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국회의원이 밥값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야당이 지적하는, 대통령 발의권에 대해서 야당 압박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책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즉 정부 발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내용입니다. 지난 아홉 번 개헌 중에 대부분이…… 국회 발의는 한두 번에 그쳤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발의를 마치 부당한 행위처럼 선동하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헌 발의를 26일 날 확인하면 우리가 국회에서 선택하는 길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헌 저지를 위해서 대통령, 즉 정부안의 문제점 내지는 부족함들을 지적하는 정치적 수사를 난무하게 하는 그런 행위 이런 길을 걷고 끝내 국회에서는 단일안은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아시다시피 기간을 단축해서 국회 논의 기간 60일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약 4월 30일까지 국회 합의안을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야당에서 우려했듯이 청와대 정부안이 가이드라인이 될지…… 이제 논의를 시작해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또 무한정이 아니고. 고무줄처럼 10월에 하자, 6월 안에 하자, 6월 13일은 안 된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4월 말까지 국민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논의됐고 19대 때 논의됐던 그리고 국민자문위원 등 각계각층에서 논의됐고 야당에서도 수렴했던 국민의 뜻을 다 모아 낸다면, 이제 남은 4월 말까지는 정말 당리당락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개헌에 함께한다면 충분히 시간은 있고 합의안도 일정 도출해 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위와 26일 이후에 우리의 선택은 국민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도 이번 주 안에 야당 개헌안을 만드신다고 하니 그 안들을 지켜보고 여야 간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통분모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 논의를 시작할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유민봉 위원 저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숙성되고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이 두 번째 헌정특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심지어 국회의원이지만 헌정특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금 어떤 조항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는지 또는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문제로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금 ‘권력구조는 이런 것이 좋겠다. 헌법 개정은 필요하겠구나’ 이런 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정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의미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언론이든, 언론에서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헌법 개정 관련해서 얼마나 그것을 어젠다로 해서 이슈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말 권력구조 4년 중임 내지는 의원내각제라든지 또는 기본권이라든지 지방분권이라든지 이런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 자체가 지금 나의 삶, 그리고 우리 2030 젊은 세대는 앞으로 30년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말 토씨 하나가, 단어 하나가, 철자 하나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을 내 문제로 생각해서 생각해 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성숙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럴까 되돌아보면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지, 관심, 집중의 총량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북한과의 긴장관계 그다음 동계올림픽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또 지방선거 앞에 있을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헌법 개정에 앞서 더 중요하게, 더 긴급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헌정특위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일이다’ 하고 달라붙어야 되고요.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이 조문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우리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 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데 여야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헌법 개정을 하는 데 아직 시기적으로 미숙하다,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오니까 여야가 직접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방도 하고 또 때로는 앉아서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도 아주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논쟁이고,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이 그리고 나의 소속의 정당까지도 심지어는 넘어서서 이 논의에 지금 임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도 저는 문제로 삼고 싶고요.

그다음,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개헌안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해구 자문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국민적 참여와 관심을 가진 그런 개헌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가 될 것이고요.

특히 정해구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권력구조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사항이라고 보는데 '4년 중임제는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으로서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의견의 수렴이라고 보기에, 더군다나 그것을 국민적 의견의 수렴이라고 보기에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여당 위원님들 계시지만 과연 여당 위원님들은 자문위원 아니면 대통령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헌법개정안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 자리 들어오기 전에 그 안을 한번 보고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가지고 싶고 저의 의견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조차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발의하는 경우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 이것을 찬반으로 바로 내용 수정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 과정을 또는 합의의 범위를 상당히 제약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야가 폭넓은 범위 안에서 수렴점을 찾아 나가는 데는 그래도 그런 제한요건, 제약조건, 영향요인들을 없앤 상태에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풍부한, 풍성한 논의와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말씀하실 순서입니다.

○**심상정 위원**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헌정특위 토론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소모적이고 또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정치 협상 테이블을 빨리 열어서 거기서 핵심 쟁점과 시기 문제를 포함한 국회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저는 해법이 나온다 이렇게 생

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4월 말까지 안을 만들자, 또 어느 당은 6월 말까지 만들자, 여기서 각자 자기 정당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원칙도 말씀하시고 또 당론도 정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 논의가 이렇게 지체된 데 제일의 책임이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한,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그런 타협안을 바로 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당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압박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발의가 국회의 여러 무기력하고 또 무능한 이런 개헌 논의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압박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낼 책임은 사실 여당에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서로 책임공방에 집중하지 마시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좁히는 노력을 통해서 국회 주도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헌정특위 위원이 된 이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정부형태 논의와 관련해서 대통령연임제와 선출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간에 양당이 한발 다가가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개개인에는 여러 안들도 제시가 됐지만요. 그래서 핵심 쟁점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국회 합의안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타협안으로 총리추천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리추천제는, 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안이지요. 또 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선출제나 또 추천제나 뭐가 다르냐, 다 이원집정부제고 다 내각제다,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총리추천제와 총리선출제는 고양이와 개처럼 다릅니다.

저는 제가 제시한 안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전부 몰아서 내각책임제다,

이원집정부제다 이렇게 왜곡하면 그것은 타협을 배제한 편협한 진영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여당 안대로밖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정부형태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 5명이 포토라인에 섰어요. 물론 대통령중심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중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임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정부형태에 대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게 국민의 뜻과 다른 겁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제가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당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지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 국회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신을 받도록 한 데 여당은 책임 없습니까? 무슨 유체이탈 화법입니까, 그게?

저는 국회가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어떻게 과감한 국회 개혁을 할 것인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국민과 국회를 대립시키면서 국회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회를 또 공격하는 이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서울 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지난 대선 때 국민 공약사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위헌적·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과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6년 9월입니다, 김성태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이시지요, 대정부질문을 하시면서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총리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나

하면 ‘구체적인 개헌안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청와대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9월에.

그리고 홍준표 대표님이 대선후보 당시에 아주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든 또는 대선 시기의 인터뷰를 통해서든 수차례 ‘정부가 발의할 수 있다’, ‘정부가 주도할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얘기하셨으면서 지금 정부가 발의하는 것은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특히 2018년 3월에 진행됐었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4년 연임제와 5년 단임제를 포함해서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국민 여론이 무려 68.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국민분들이 대통령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4년 중임제를, 연임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게 46.3%나 나왔습니다. 재밌지요.

최근에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그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여러 단점들, 그것으로 인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통령의 비참한 말로, 다 눈으로 보시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대통령제가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정치체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했으니깐 안 된다. 이것 봐라’라는 말씀은 국민분들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4년 연임 또는 4년 중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 또는 ‘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2017년 4월 12일 날 공문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4년 중임제 하면 독재로 가는 길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4년 중임제로 개헌안을 내겠다 하면 독재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거 전 하고 선거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자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도 보면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연합뉴스하고 2017년 4월 12일 날 인터뷰하신 거에도 지방선거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모든 대선후보들이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믿고, 또 국민분들은 무엇을 믿고 개헌 시기를 늦추면 당연히 개헌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하겠다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말 바꾸기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년 넘게 개헌특위가 가동이 됐었고 또 헌정특위라는 이름으로도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개헌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개헌안을 만드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하면 됩니다. 정부안도 나왔고, 여당안도 있고, 야당안도 있다면 논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늦추거나 또는 논의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모든 대선후보가 국민들께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반드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정치권, 특히 국회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신뢰를 못 갖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이종구 위원님 순서인데 우선 건너뛰시는 거지요?

그러면 윤관석 위원님 의견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99주년, 또 87년 체제 31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개헌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중요성을 얘기해 왔습니다. 개헌특위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정특위는 올해 출범했지만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개헌특위를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정개특위에 합쳐서 헌정특위가 됐던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합치면 한 15개월 정도 현재 진행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국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했던 시간들이었지요. 하지만 헌정특위가 요즘에 와서는 ‘이것이 정녕 헌법 개정을 하려는 특위냐’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열면 주로 정치공방, 그다음에 진의에 대한 서로 간의 의구심 이런 것만 해 왔습니다. 물론 여당도 다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것이 그냥 주구장창 논의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고. 이 특위 자체도 6월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것을 연장해서 빨리 하자’ 원래 원내대표끼리 협상할 때, 헌정특위를 만들 때는 사실 2월까지 정도로 하자라는 얘기가 유력한 안으로 얘기될 정도로 일정하게 국회에 주어진 시간의 시급성, 한시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털어 버리고 그냥 계속 토론하자 이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타이밍, 발의의 마지막 시간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절차상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축적된 논의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측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주로 엇박자, 여러 가지 개헌 의지와 열정에 찬물 끼얹기, 개헌 추진에 대한 발목잡기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껏 진행이 안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정특위가 이제 논의할 만큼 했다.

저는 제안드린다면 일단 우리가 의지를 보이려면, 그리고 정부가 발의하겠다는 문제들에 대해

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헌정특위에서 우리의 의지를 명확히 보이자.

첫째로는 여기에 대해서 두 트랙으로 가동합니다.

작년 개헌특위 때도 국회의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부터 해서 조문소위를 만들어서 일단 한쪽에서는 조문작업을 하면서 차이점이나 또 합의된 것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진행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더 추가 토론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헌정특위도 축적된 논의들을 결과로 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문화시켜 나가는 작업들도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 협상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헌정특위가 일차적으로 담당해서 논의합니다마는 이것은 또 각 당의 모든 의견을 집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내대표들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2+2+2의 협상 제안도 저희 당에서 20일 전부터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정특위가 당연히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헌정특위의 간사들…… 또는 형식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간에 원내대표 회담과 헌정특위가 함께하는 정치 협상 테이블을 즉각 가동해서 거기에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 요구사항, 공통점, 차이점, 그다음에 정부 측과의 소통 문제, 국회 주도의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 협상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헌정특위에서 오늘이라도 결의해서…… 사실 정부 측 발의안이라는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것입니다. 저희가 논의는 충분히 해 왔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빨리 시간 압축적으로 해서 헌정특위에서 결의해서 ‘국회가 언제까지는 헌법개정안을 내겠다. 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이것들을 의지를 갖고 정말 국회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헌정특위에서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를 오늘 하는 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도 간사들께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6·13에 대한 발언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기도 했고 또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머나먼 뒤로 미루어 버리거나 또는 또 말 바꾸기 해서 ‘6월에 안을 만들어서 그 뒤에 하자’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미봉하려다 보니까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는 제안들이 자꾸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헌정특위가 국민적 신뢰나 국회의 시간이나 국회 주도를 주장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헌정특위에서 조문소위의 가동, 그다음에 정치 협상 테이블의 요청과 즉각적인 참여, 그리고 헌정특위 자체의 결의를 통해서 국회 주도의 개헌을 빨리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를 간사 분들께서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정종섭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鄭宗燮 위원 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반복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작년부터 특위에서 굉장히 우려하였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 작년 개헌특위 논의 중에 간헐적으로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개헌특위에서 ‘정말 대통령께서 자체해 주시고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부분부분 내용도 얘기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이런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된다, 합의되는 부분만 하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특위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결국은 오늘 와서 대통령의 입장이 거의 윤곽을 드러내는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될 것 같으면 무슨 논의가 지금 가능할 것이며 또 여기에서 이런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가령 의원내각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에 대

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국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나는 내각제 개헌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이 반대할까요? 국민의 다수가 '내각제 개헌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로 다 뚫어나오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대 국회가 출범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자'라고 했을 때 국민의 80%가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여론조사 보면.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을 작년 특위 때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하나하나씩 물어봤으면 어쩌면 내각제 개헌하자라고 갈 수도 있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정말 나는 내각제 개헌 하고 싶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쯤 내각제 개헌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논의들을 전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자' 이라서 1년 내내 공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도 또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통령제 틀을 유지하고 임기를 늘리겠다. 거기에 동의할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뭐냐 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뽑되 대통령 권한을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행정부를 운영하는 것은 총리로 하자. 그 총리는 국회의원 마음대로 뽑지 말자. 국민이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 불합리한 것이고 왜 이게 발목 잡는 것이냐. 왜 그러면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기한을 정해서 발의를 하겠다.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철회하는 것이 무슨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가원수가 지금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고 잘 안 되면 철회하겠다.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발의되면 발의된 이후에는 절차가 그냥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불쑥 냈다가 그것을 철회하고…… 저는 국가운영이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이냐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여당한테 전달을 하고 '정부에서는 이리이러한 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을 만들 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참작해서 여당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라서 정부 여당이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 논의를 우리 개헌특위에 모아 가지고 어쨌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것을 당장 오늘이라도 중단시키십시오. 그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중단시켜 놓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개헌특위에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와 성토가 있으셨습니다. 국회가 이런 일로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저도 동의가 되고 저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는가라고 하는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제 와서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각당의 역사와 또 그동안의 논의 결과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특위가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선거 전까지 일주일에 최소한 세 번 이상은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백 번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결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헌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논의 못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가이드라인 제시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당을 제외한 야당들끼리 헌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을 정리한 적이 있었지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했습니

다. 여당하고 전혀 의논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헌법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국민의 대다수가 헌법 개정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헌법이 개정돼야 되고, 특히나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논의의 이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그동안에 사실 국회에서 하지 못한 많은 일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이라도 정치적인 테이블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헌법개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6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제1 야당에서 있으시면 사실은 그 이전에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안 계시지만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헌법에 보장하는 대로 개정안을 내시고 국회 헌정특위는 그 논의를 멈추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안들을 계속해서 의논하면 됩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논의 못 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정권 초기에 이렇게 헌법 개정하려고 했던 대통령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적기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지방선거와 함께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 대다수도 지방선거와 함께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 3월 13일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개헌 관련 분석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82%예요.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어떻

게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바들, 우려하시는 바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을 분산해 본 적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시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가 훨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그동안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한 것이 아닌지, 논의를 통한 공전을 시킨 것은 아닌지 먼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물론 그 일원 중의 한 명으로서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시간 논의하는 한이 있어도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고 시대적 사명에도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안을 발의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하고, 또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이……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팩트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가 물론 국회가 자질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제 그 자체 때문이라는 것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당이 사실상 정치 과정에서 패싱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이 강력하게 대통령과 대치하다 보니까 여당은 독자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니셔티브를 거의 갖지 못하고 대통령이 주고 청와대가 준 이니셔티브를 그냥 맹목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항상 대치가 심하고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는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든지 합의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중요한 이유가 강력한 대통령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야당과의 대립, 그 대립 과정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일정 보이콧하는 것하고 여당이 제의하는 각종 대화에 대해서 불응하는 것밖에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통령제의 강력한 권한 때문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강력히 선호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책임총리제를 거부하는 논리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 제5차 개헌부터 총리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일방 독주로 하다 보니까 정치 과정이 생략되고 정치 과정이라고 해 봐야 여야가 아주 불쌍사납게 싸우는 모습만 가지니까 책임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굳이 책임총리제와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날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당에게 현재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그냥 밀어붙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고 지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합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현실하고 안 맞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는 이유도 너무 강력한 대통령 권한 때문이고 두 번째, 책임총리제가 결코 대통령제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는 측면을 제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사실상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통령 임기를 늘리면 개인 장기 독재는 아니지만 일당 장기 독재로 가자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자유한국당 어느 정치인이 이것은 장기독재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다시 임기 연임은 하지 못하니까 팩트가 틀렸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당 독재로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계속 가는 것은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이 제안하는 안을 관철시키는 지침 역할을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개헌을 원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뒤로 미루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정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최인호 위원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강도 높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 발의는 사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국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은 작년부터 누차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발의를 코앞에 둔 지금 이 시점에도 사실은 제1 야당은 개헌안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발의안을 대충 보고 그 안에 반대되는 안을 내서 사실상 개헌을 어렵게 하겠다는, 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은 절대 불가하다는 이런 정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어서 당론 확정도 늦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서는 저희 당이 또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앞세워서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 여론보다도 더 중요한 개헌의 요소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반대하면 무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폄하하는 자세로는 과연 올바른 개헌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총리 선출제 이것이 아마 며칠 후에 당론으로 정할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행정수반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면 그건 명백히 내각제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반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 이것이 오스트리아식 내각제, 핀란드식 내각제…… 그러니까 국민 의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사실상의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발의안만 계속 비난하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거듭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시간만 연기된다고 해서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어떻게 좁혀질 수 있느냐? 저는 아무리 밀도 있는 논의를 해도 전혀 합의점을 못 찾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꾸 시기만 연장하자. 대통령 발의를 비난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4월 달까지 약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사에 기초한, 개헌이 가능한 현실적인 권력구조안을 지금이라도 만드는 노력이 여야 공히 필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4년 중임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제로 개헌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인사권·감사권·예산권·법률안 제출권의 상당 부분을 국회로 또는 독립기관화시켜서 이관하자는 데 자꾸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안에 대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원론적인 사실도 아닌…… 4대 권한을 국회에 이관하면 얼마나 협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의 실제적인 목표에 근접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꾸 사장시키고 ‘제왕적’이라는 접두사를 쓰는 정략적 의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심상정 위원님이 주로 국회 추천제를 말씀하면서 자꾸 개와 고양이처럼, 추천제와 선출제는 다른데 같은 것처럼 취급한다 하지만…… 물론 개와 고양이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리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를 그리라는 것이지 개나 고양이를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랑이를 그리라는 그 점에 주목해서…… 덩치 큰 한국산 호랑이면 어떻게 시베리아산 또는 아프리카산 호랑이면 어떻습니까? 호랑이를 그려야 됩니다, 호랑이를. 그래야 국민들이 원하는 데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고 실제 개헌이 가능한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추천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례로 보면 결과적으로 추천제가 정치적 효과의 면에서는 다 내각제로 귀결되더라. 특히 여소야대일 때는 야당 추천 총리가 될 수밖에 없고 당적이 다른 대통령과 총리가 어떻게 국정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

서 국민 의사에 기초한 현실적인 개헌안을 만드는 데 지금이라도 총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이종구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김재경 먼저 하실게요.

○박병석 위원 이종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종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87년 헌법 체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라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특히 6·10 항쟁의 힘으로 직선제를 하자,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소위 체육관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뽑자, 이러한 것이 실현된 헌법이었던지요.

민주당 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이번 개헌은 소위 촛불의 힘이다, 촛불정신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정신이 뭐냐? 촛불정신은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헌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오남용, 소위 제왕적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어떤 측면에서는 강화하고 또 일당 독재가 가능하도록 중임제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수 있는 바른 방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집중된 권한을 나누어서 행사하는 제도,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한국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회에서 선출하자, 그렇다 그래서 각료 모두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를 선출하고,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할 적에 총리가 제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어느 정도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자, 그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다, 합리적인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중심제로 하면서 현재와 같이 그냥 간다? 예산법률주의 조금 하고 감사원 독립을 조금 하고 이것

은 아니다, 지금도 헌법에 감사원은 독립되도록 돼 있어요. 예산법률주의? 예산을 법률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필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감고 아옹하는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제1 당이 국무총리에 취임을 해서 1 당의 대표가, 누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한국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안도 민주당 측에서 고려를 해서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지금 오만해지고 있어요. 왜 오만해지냐? 헌법에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을 줬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발의할 시점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것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발의해 가지고 국회에 갖고 오면 국회 통과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다른 뜻이 있다,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3분의 2를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하던 식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런저런 회유하고 압박하고 안 되면 안기부 끌고 가서 막말로 조지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3분의 2를 넘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진짜 국회를 무시하고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우리 야당은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철회가 돼야 되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정부 여당이 대통령하고 소통을 하세요.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대표가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뽑힌 다음에는 국민의 그러한 마음을 다 헤아리고 또 더 큰 어른으로서, 그야말로 국민들의 더 큰 존경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안 될 것 알면서 왜 뵙니까?

○위원장 김재경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국민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제하는

것은 개헌이 되면 현 대통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헌은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개헌이 현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또는 지금 야당 위원들의 표현에 따르면 일당 독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김대중 두 진보정권이 독재가 아니고 이명박·박근혜정부의 10년이 독재가 아니듯이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현 대통령이 어떤 권한을 피하거나 당이 독재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국회가 주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헌법은 3공화국을 제외해 놓고서는 모두가 대통령에게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당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분권형 대통령제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가 솔직히 나타내지를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입장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야당은 아직 입장 정리가 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당 안을 먼저 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안도 준비가 됐을 때 여당 안을 밝히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권한을 이양하는 데에 여당도 전혀 이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논쟁의 숨은 초점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6·13 때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은 무산된다. 적어도 이번 국회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진정한 속뜻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6·13 선거에 같이 동시투표를 하자는 것이 이 지자체 선거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인 뜻이 숨어 있다’ 지금 이게 초점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걱정하는, 이게 지자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당이 보증하고 야당은 진정으로 우리가 개헌할 뜻이 있다는 것을 확약해 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복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생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전이 안 되느냐? 우선 우리가 보면 정말로 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자고 우리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큰 틀의 정치 협상을 제안하면 거기서 각 당의 안이 나오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것을 6·13에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야당으로부터 정말로 야당도 타협할 의사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정치 협상에 응하지 않는가, 그것이 하나고요. 만약에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한을 헌법개정특위에 넘기겠다는 당 지도부의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 협상도 하지 않고 헌법개정특위에 전권을 넘기겠다는 선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작년에도 헌법개정특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 헌법 개정 논의가 대개 3개월 정도로 끝났어요. 이번 국회는 작년에 1년을 했고요, 금년에 3개월을 더 했습니다. 작년에 스물세 번의 전체회의와 열여덟 번의 소위가 있었는데 저는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토론과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2차 헌법개정특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헌법개정특위에 몸담을 때 상당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제안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계속 속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우려했던 것을 서로 해소시켜 주는 안을 내고 합의를 하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큰 틀의 정치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헌법개정특위에 전권을 넘기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권한 있는 실질적 진전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황영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영철 위원 황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헌정특위의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나서 여당 위원님들과 청와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요청드렸던 것이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면 이 헌법 개정 논의가 오히려 시간만 잡아먹게 되고 진정성 있는 국회 논의를 방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발의 수순을 멈추고 오히려 여당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러한 야당의 요청을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 부분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헌법 개정의 진정성이 없다, 그리고 꿈수만 부리는 정당처럼 표현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아직도 앞에 가로막힌 이 벽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에 대한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간사를 맡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당 지도부와 우리 헌정특위 위원들 간의 집중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집중 논의의 결과가 바로 우리 기본적인 당의 원칙들을 마련하는 진전된 행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까지 영호남 지역주의와 거대 양당의 기득권으로 온존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혁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시대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자유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청했고,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의 이런 진정성 있는 논의들을 견인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행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대통령은 산산조각 깨 버리고 오히려 ‘마지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야당 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면박 주고 이 면박이 끝나면 개진 판을 가지고서 국회를 국민의 불신으로 몰아넣고,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대통령은 바깥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청와대만 가면 왜 그렇게 제왕적이 되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조금 더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다 나쁜 헌법개정안이었어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1 정치세력과 여야가 합의를 토대로 해서 만든 법이 헌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늘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편향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제출된 게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좋은 헌법개정안을 발의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야당과 한 마디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단독으로 발의된 이 헌법개정안 발의된다면 저는 나쁜 헌법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나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는 거부될 것이 뻔한데……

그래서 저는 헌법개정안 발의의 입장은 밝히셨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안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야당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지요. 그리고 또 우리 야당에서도 이제 정치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도 대통령의 잘못된 행보로 인해서 우리 여와 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26일 발의하겠다는 대통령 발의안 집권여당의 안으로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헌법개정안 반드시 만들어서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헌법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인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한 마디 한 마디 속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가, 그런 것 중심으로 대화에 또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우선 두 가지는 우리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 협상 혹은 지도부와 함께하는 이런 협상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 문제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여 일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3+3 회의 이런 것도 제안했고 그 시점쯤에 ‘개헌 일자만이 협상의 대상이다’ 이런 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별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2 회의, 협상 이런 것들도 제안했는데 GM 국정조사 문제나 아니면 청년일자리 추경예산 이런 것과 연계되면서 정치 협상은 한 발도 진척을 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협상은 개헌과 관련한 정치 협상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로 국한해서 정치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와 맞물려서 국회에서 이 논의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는 무용한 것인가,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 과정을 한번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3월경에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개헌특위가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신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 과정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가진 헌법상의 개헌 발의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중 삼중으로 개헌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놓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수한 정신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해석한다면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촉진하거나 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의 가능성들, 동시 개헌의 가능성들을 높이는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적절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다면 그 문제와 별도로 그러면 국회는 국회의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신다고 해도 국회는 국회의 논의를 그대로 진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지나면서 말씀드리면 21일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다만 며칠이라도 늦춰지고 그 과정에 지금 국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본격적 정치 협상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시작하고 거기서 기적적으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할 것이다 이런 충정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소한 며칠이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며칠 동안에 우리가 전기를 열 수 있다면 열어야 한다 이런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만일 우리가 그 안에 정치 협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열지 못한다 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대통령 나름대로 공약을 지키고 또 국민과의 약속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시한인 4월 20일경까지 정치 협상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가 헌정특위에서 개헌 논의의 돌파구를 열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충실하게 합의 개헌을 시도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기적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적적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고 합의 개헌의 가능성을 찾았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다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로가 논의를 하다 보면 장외에서는 서로 격렬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조금 부풀려서 정치공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권의 묘미이기도 하고 또 맛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4년 중임제 이걸 개헌특위에서 처음 정부형태와 관련해서 논의했을 때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대통령의 권력 그것을 그대로 임기만 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는 누구도 해석하지 않는다,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확인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한국당에서 표현했던 제왕

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자는 것이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하는 것이든,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같이 공감하면서 출발한 것이었기 때문에 '4년 중임으로 가는 것은 단순한 장기집권 연장 음모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질의는 끝났는데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협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경협 위원 대통령 4년 중임제나 1회 추가 연임제가 일당 독재로 가는 길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거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4년 중임제 취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국을 일당 독재 국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의 대통령 개헌 발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내용도 보지 않고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오히려 지금 국회 논의가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7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내각제나 아니면 의원집정부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의원정부제는 의원정부제이고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인 것이지 국민들이 대통령제가 낫다고 그래서, 그리고 의원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지지가 낮다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분권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대통령제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당연히 사실상의 내각제이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충분히 의원정부제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부 내에 의원권력이 만들어지고 이 의원권력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방지

책이 없다면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국회만 오면 정쟁화하는 것이 현재 우리 국회의 엄연한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은 갈등지수가 또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념의 간극이 대단히 큼니다. 아주 대단히 극단적입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것도 연방제 적화통일에 동조한다고 공격을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지극히 국제적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회주의 헌법 정도로 이념 공세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연정이나 협치가 가능하겠는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6월 달에 동시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 14일 날, 엇그저께이지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동시에 실시해야 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82.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이 넘도록 국회특위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국회 역사상, 개헌 역사상 가장 긴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투표 할 경우에 국민의 혈세 1200억 원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이 국민투표가 과거하고 다르게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투표나 이런 것처럼 뚜렷한, 국민들의 의지나 이런 게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국민투표만 덜렁 따로 부치는 것이 50%의 투표율을 넘는다고 하는 보장이 있겠는가?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에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큰 장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선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총선이 중간선거로 작동하게 하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지금 지방분권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수준과 권한을 결정해 놓고 선거를 치르는 게 순리적이지, 먼저 선거를 해 놓고 사람을 뽑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권한과 수준을 부여하는 것은 저는 비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 이번 6월 동시투표,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발의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국회 논의와 협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회 논의를 못 하도록 대통령 발의가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 논의도 계속할 수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만약에 국회가 여기에서 합리적인 안을, 개헌안을 합의해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 부분이 국회의안이 먼저 존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아까 제가 대통령의 발의를 막고 국회의 주도로 개헌을 하려면 일단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개헌에 대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 활동이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또 헌법 개정특위에서 토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의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의 장단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상대방 위원님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가 각자 다 좋은 말씀들 하고 계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적어도 타협 의지를 내포하는 그런 발언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자기주장만 계속되고 있다면, 개헌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주장만 반복된다면 결국 6월 13일 날 동시투표는 불문하고 6월 말에 과연, 아니면 어찌면 올해 안에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헌정특위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야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협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갖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1 야당 같은 경우는 개헌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전제만 된다면 저는 훨씬 더 토론이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대통령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부형태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속에서 문을 열어 놓고 토론이 돼야 훨씬 생산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 겸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 가지고는 결국은 대통령의 발의안은 발의안대로 부결시키고 국회는 국회안도 또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난 1년 이상 이 개헌안을 다뤄 왔던 국회가 과연 속기록을 통해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큰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1당과 제2 당의 정치력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섭 위원님.

○鄭宗燮 위원 여러 번 반복된 얘기지만 정부형태 명칭이 어떻다 저렇다 이런 공격을 하고 뭐 하고 이것이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이미 위원님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됐습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배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해 보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옮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이것이 현재 있는 우리의 제왕적 대통령제 정부 운영의 실패, 국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형 정부형태라도 괜찮다. 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적인 이런 반복된 얘기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체제에서 권한 일부만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3일 날 개헌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다시 하고 국회의원선거 다시 해야 되는데 별 차이 없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번에 개헌하면 이 헌법은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에서 큰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이 권력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새로운 권력구조를…… 예를 들어서 양원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양원제를 구성하는 총선은 다음 총선 때 일단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행 대통령은 임기 5년이 보장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가능하겠지만 별 것 아닌 권한 몇 개 옮겨 놓고 ‘그러면 다음 정부부터 시행하자’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개헌을 논의할 때는 이제는 정치적인 공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30년 만에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결실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金成泰 위원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개헌특위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소위에서부터 전체회의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온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함을 느낍니다.

제가 개헌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역사에 평가를 받을 것이다, 정말 진정한 노력을 한 그런 주체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고 하는 것이 저는 옥석이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개헌 시기와 방향 그리고 정부형태와 로드맵 그리고 선거구제와 관련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하여 국민들의 대표성을 감안한 국회 개헌안까지 감안해서 전폭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수용하겠다고 한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회에 이러한 개헌 과정을 맡겨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은 좀 더 목소리를 내 가지고 여당 주체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님께 말씀을 하셔야 됴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지금 한 단계 두 단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회가 노력을 안 한다 이런 폼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이 자체가 또한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여당에 권한을 충분히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을 또 개헌 과정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개헌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개헌 로드맵이 나온 마당에 앞으로 대통령은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을 내겠다라는 것을 철회하고 국회에 한 번 더 맡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에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하나만이라도 개헌하자고 피를 토했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신 말씀을 벌써 잊었던 말입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 내각제까지 고려해서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래를 위한 그러한 국민의 여망에 맞는, 30년 만의 이러한 개헌의 기회를 차 버리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다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안을 여당에게 넘겨줘서 타협 정치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일이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짧게.

지금 우리 당 위원님들이 다 안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는 정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개헌안 그게 발의되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여당의 개헌 협상 과정에 혹은 국회 논의 과정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렇

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의 선후 관계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적어도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 개헌안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후 관계도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방향에서 같으면 대통령의 개헌안과 당의 개헌안이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일치하면서 한다면 저희가 야당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청와대의 국회출장소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소소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해 2월 1일, 2월 6일 개헌특위에 속했던 우리 당 위원들의 자체 워크숍 과정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과정 속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또 국회 논의를 임해 오는 과정이었지 그렇게까지 저희가 오명을 낙인을 받으면서까지, 야당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지금까지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도 이미 말씀하신 거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비해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합의하는 과정이 더 넓은 합의, 더 본질적인 합의 이런 것들까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들, 더 넓은 논의들 이런 것들을 해 왔고 지난 1년 3개월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거기에다 묶여서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혹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개헌안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마치 당이 행동해 온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신뢰에 너무 많은 손상이 생기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이제 좀 덜 하셔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가지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꼬리 잡는 언쟁을 위한 언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강의도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심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한 당론을 정리하고 국회에서 야당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율성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런 합의를 혹은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런 합의를 시도해 보는 이런 과정에 있다 이런 점들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중의 하나가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 것은 존중을 하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헌정특위에서 이 제한된 일정과 조건 속에서 앞으로 국회 개헌안 마련을 어느 단위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정특위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 대표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지금 각 당이 나름대로, 정치 협상 테이블조차, 테이블의 안조차도 다 각각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동안에 우리 개헌 논의를 주도해 왔던 또 각자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논의해 온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헌정특위에서는 국회 개헌안을 어떤 식으로 어느 단위에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정도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각 당 간사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간사들이 다 자신이 속한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하실 텐데 그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도 사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논의해야 될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 얘기 한마디 하고 다 지금 바쁘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과 대

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경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이제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다음 회의는 3월 26일 날 월요일 10시…… 10시요? 오후 2시에 하겠습니까만 그때 논의 주제는 간사님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특위가 우리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다들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김 경 협	金 成 泰	김 재 경	김 중 민
김 진 태	나 경 원	박 병 석	박 완 주
박 주 민	심 상 정	안 상 수	유 민 봉
윤 관 석	이 인 영	이 중 구	이 태 규
정 중 섭	정 춘 숙	정 태 옥	지 상 옥
최 인 호	황 영 철		

○청가 위원(1인)

김 상 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한 공 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정 성 희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

(2018. 3. 7. 박성중·이은재·金成泰·박순자·장제원·강석호·홍문표·김상훈·곽대훈·김성찬·박덕흠 의원 발의)

3월 1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3. 14. 정갑윤·김명연·최연혜·이재익·이진복·박맹우·윤한홍·김진태·김종석·신상진 의원 발의)

3월 15일 회부됨

○청원 회부

평화롭게 살 권리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에 관한 청원

(2018. 3. 15.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으로부터
김종대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15일 회부됨